[성명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10월 21일 교사들의 정당가입 공동행동을 지지하며

지난 10월 21일 전국의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뜻을 모아 5천 명의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역사적인 공동행동에 나섰다.

우리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와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16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에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교사의 헌법적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곧 교육의 정치적 편향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로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공동행동은 교원단체들의 정치적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요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교사는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교사들이 정작 정책과 입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정당 가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교사들이 5천 장의 정당가입서를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선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10월 2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공동행동을 지지하며,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학교 밖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정치후원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특히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10월 21일 공동행동에 나선 교사들과 함께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1월 10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 일동

(가나다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삼영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충청남도교육감 이병도